

# “윤 대통령 제안하면 언제든 만나겠다”

### 취임 한 달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

### 정치인재 발굴·육성 시스템 구축

### 여당 권력 다툼, 대통령 민생 외면

### 위기 극복 사회적 타협 기구 필요

취임 한 달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과 민생·경제를 주제로 한 일대일 회담 가능성에 대해 “윤 대통령이 제안을 하면 저는 언제라도 대화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지난달 10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식으로 취임한 지 한 달을 맞아 이날 국회에서 가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민주연구원 산하에 인재 발굴·육성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여야 협상을 통해서 정당 싱크탱크 내에 인재 육성 체계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에서 오래 활동하던 분들이 ‘나도 신상이었는데 중고가 된다’는 박탈감을 호소하곤 한다”며 “선거에서 인재를 영입하는 것도 해야 할 일이지만, 당 차원에서 청년·여성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촉발된 ‘롤 칼 등’과 관련해서는 “견해가 다른 의원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땐 지도부 면담을 먼저 신청하고 그 속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기자회견장으로 먼저 달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기자회견장은 당내 대화가 막혀있다고 판단될 때 가는 것이 맞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결정된 룰에 대해서는 “당의 정체성이 흔들릴 정도의 제도 개선은 지도부는 신중해야 한다”며 “누가 나올지도 완성되지 않았는데 유불리를 먼저 고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취임 두 달 평가를 스스로 하시고 국정운영 방향에 변화를 가져와야 할 시점”이라며 “여당은 권력 다툼으로 정신없고, 대통령은 민생에 소홀하고, 대통령 배우자는 국가분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부로 하고, 문제제기는 무시하는 과정에 국민 사이에서는 실망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MF나 2008년 금융위기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가 오고 있어 사회적 대화 기구도 필요하고 여야 간 대책 논의 기구도 필요한데 이것을 왜 야당이 제안하고 있는지 답답하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먼저 만나자고 제안하고 야당이 응하는 것이 국가의 모양에 있어서도 좋다. 제안하면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우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저는 민생과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협력도 아끼지 않을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10월께가 되면 민생·경제 분야에서 굉장한 복합 위기가 몰려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급등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불경기가 찾아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할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 삶이 전체적으로 몰락하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다. 초기 대응을 잘 하지 않으면 못 막는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발목 잡기, 꼬투리 잡기를 하지 않는다”며 대통령과의 일대일 영수회담이든, 과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형식의 대화든 언제든 나설 수 있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우 위원장은 정부의 경제대책 방향이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위원장은 “법인세 완화, 규제 완화, 재정준칙 법제화 등 정부 대책을 보면 전부 중장기 대책이다. 위기는 눈앞에 있는데 3~4년 뒤를 내다보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너무 한가한 것이 아닌가. 위기 대응 시스템이 지나치게 안이하다”고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송갑석 민주 지도부 입성 성공할까

### 13일 전후 최고위원 도전 선언

### 호남 민심 창구 역할 주목



진입이 크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에 호남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했던 데 한 호남 민심의 갈증이 컸다는 점에서 이번 전

대에서 송 의원의 최고위원 진입에 당원과 민심의 결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송 의원이 전대협 의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인영, 임종석, 우상호 등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86 진영의 계보를 유지해 나갈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런 가운데 호남 단일주자인 송 의원과 친명(친 이재명) 진영이 민주당 혁신과 윤석열 정부 견제를 고리로 연대 전선을 구성할지도 주목된다.

민주당의 심장인 호남과 새로운 주류로 떠오른 친명 진영의 연대는 상호 윈-윈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친명계 일각에서는 송 의원에 대한 견제 흐름도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친명계 핵심 중진 의원은 최근 이재명 상임고문의 당권 도전에 미온적인 호남 국회의원들을 거론하며 차기 총선에서 ‘호남 물갈이론’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서구 갑·사진)이 오는 13일을 전후해 전당대회에서의 최고위원 도전에 나선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송 의원이 친명(친 이재명)계의 견제를 뚫고 과연 지도부 입성에 성공, 호남의 민심의 창구가 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10일 송갑석 의원은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는 12~13일 최고위원 출마 선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어 호남 민심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민주당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한편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는데도 선봉에 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의원의 출마는 호남 국회의원들의 실질적 추대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21대 국회에서 나타난 ‘호남 최고위원 잔혹사’를 끊어낼 것인지 주목된다. 21대 국회에서 전북의 한병도 의원과 전남의 서삼석 의원이 두 번의 전대에서 각각 호남 단일주자로 최고위원 도전에 나섰으나 모두 실패했다.

정치권에선 호남 민심과 관리당원들의 결집, 민평련 등 중도·개혁 성향 국회의원들의 측면 지원 만 원활히 이뤄진다면 송 의원의 민주당 지도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차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지차단체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제공>

## 강기정 시장·김영록 지사 윤대통령에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건의

###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 추경호 부총리에 국고 지원 요구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전 등을 건의했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새정부 균형발전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과 함께 새 정부 기획 발전 특구의 첫 번째 모델로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건의했다.

강 시장은 이날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해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산업이 커져야 하고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정책이 요구된다”며 “새 정부에서는 산업정책과 교육정책이 같이 가는 균형발전 정책으로 균형발전 3.0시대를 열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특히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광주·전남 인접지역에 300만평 규모의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면서 “새 정부가 기회발전특구의 첫 번째 모델로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하면 광주·전남이 함께 지역 균형발전과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재도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겠다”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새정부 지방시대에 걸맞은 중앙권한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지방 이전과 반도체 특화단지의 지방 선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또 광주 인공

지능 사업과 연계한 생태계 구축,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을 통한 미세기술 확보, 풍부한 산업용수와 초고압 전력망, 국립과대학 설치, 1999년도에 정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기존 5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상향,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등 시급한 지역 현안도 건의했다.

김 지사는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반도체 특화단지는 지방으로 반드시 와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와도 반도체 동맹에 참여하는데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자진 사퇴

### “국민기대 부응 확신 안서”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0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큰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교직에만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송 후보자는 지난 4일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 후보로 지명됐다.

송 후보자는 지명 직후 언론 보도를 통해 2014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학생 100여명과 의 저널 자리에서 만취한 채 “넌 외모가 중상, 넌 중하, 넌 상”이라는 식으로 외모 폄평을 하고 성희

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송 후보자는 지난 5일 기자 간담회에서 “언론에 보도된 팩트는 대부분 맞다”면서 사과했다. 그는 “그것 때문에 제가 자격이 없다거나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자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민약이 일이 커져서 도저히 이견 아니다 하면, 흔히 말하는 낙마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송 후보자의 사퇴 발표는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지난 8일 국회에 제출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송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다. 사법·외무·행정고시에 모두 합격한 ‘고시 3관왕’으로 상법·회사법 분야 권위자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공공기관장 거취논란...민주 “대통령과 임기 일치 특별법 검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거취를 두고 여야간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주요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알박기 인사 논란’이 반복되고, 주요 정부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에 따른 신규 권력 간 충돌이 재연되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개선해보자는 취지다.

다만 민주당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기

관장 인사 문제와 관련된 고소 고발 사건이 모두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인 여야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1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권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사퇴를 요구하며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는 상황과 관련해 “(정치보복) 대응 TF에서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데, 원론적으로 보면 저는 대통령과 주요 기관의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투자자 모심

1. 자금 - 5억원 이상
2. 기간 - 2년~3년 정도
3. 물건 - NPL, 금매물, 경매특수물건
4. 수익 - 연 20% 이상 법적 보장
5. 보장 - 근저당 또는 소유권 이전
6. 지역 - 경기, 수도권, 전남/광주
7. 방식 - 단독 또는 공동투자

주식회사 오 천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  
H. 010-3605-5000